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4년 10월 9일(목) 조간
담당자	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(044-550-4046, dccho@kdi.re.kr)
배포일시	2014년 10월 8일(수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KDI 정책세미나

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

경제정책 방향

- 일 시: 2014년 10월 8일(수) 14:00~16:30
- 장 소: 은행회관 국제회의실(2F)
- 주 최: KDI

- KDI는 10월 8일 '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'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, 보다 바람직한 거시경제, 금융, 노동시장 구조개선,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함.
- 김준경 KDI 원장,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,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,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,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,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,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, 백웅기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,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,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,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

❖ **첨부 1. 프로그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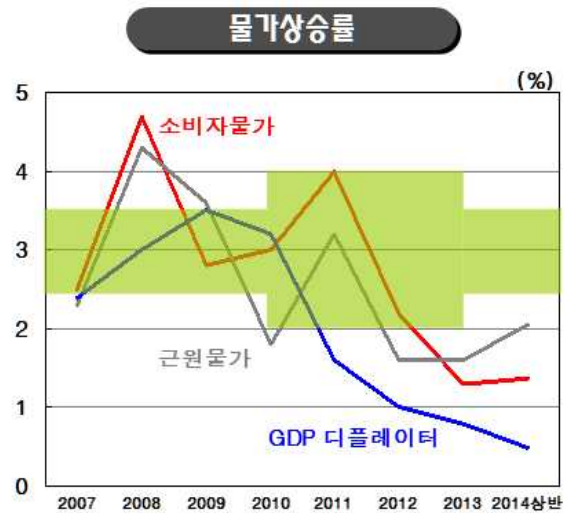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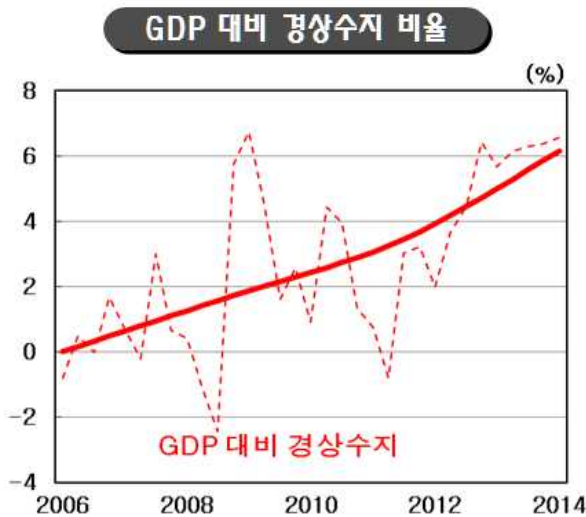
시 간	내 용
13:30~14:00	등 록
14:00~14:10	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
14:10~15:30	<p>발 표 1. 거시경제 정책방향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</p> <p>발 표 2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</p> <p>발 표 3.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</p> <p>발 표 4.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</p>
15:30~16:30	<p>종합 토론</p> <p>사 회 김준경 KDI 원장</p> <p>토 론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백웅기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국차장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</p>

❖ 첨부2. 발표 요약

발표 1. 거시경제 정책방향

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

- 우리 경제는 고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수년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를 지속적으로 하회



- 단기적으로도, 작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던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금년 2/4분기 이후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 축소되지 못하고 있음.



- 따라서 향후 수년간은 적절한 수준(예: 5~6%)의 경상성장률을 회복, 유지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
 - 3%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과 2% 내외의 인플레이션(GDP 디플레이터 기준)이 유지될 경우, 5~6%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가능
- 이를 위해 통화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(예: 2~3%)을 유지하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
 - 현재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‘금융안정’ 등 다양한 목표가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, 오히려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한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.
 -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금융감독(특히 상호금융권역) 강화를 병행
- 재정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달성 가능한 경상성장률(혹은 세수증가율)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유지
 -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내수의 마중물로서, 공기업 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방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분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용인
 - 이와 함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, 공공기관 부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·잠재적 재정적자 확대 요인을 축소할 필요
- ※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을 일시적 경기침체로 오인했을 경우, 적자재정은 금리인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정책방향임.
 - 통화당국이 디플레이션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반복한 결과 국가부채가 급증한 일본의 지난 20년을 반면교사로 참고할 필요

발표 2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

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·복지정책연구부장

-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하여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일부 유노조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완화와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해소를 제시

-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부분은 불과 7% 정도에 불과한 유노조 정규직 대기업과 공기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체협약 등으로 지나치게 과보호 받고 있는 것이 문제
 -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과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에서 3배, 근속기간에서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신규채용율의 경우는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이 절반(45.5%)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는 6.2%에 불과함.
 - 따라서 한국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.4%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직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움.
 - 이를 노동조합 조직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체 근로자의 10% 정도만이 노동조합원으로 분류되고 있음.
 - 또한 300인 미만 대기업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7.2%에 불과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32.3%임.
 - 한편, 공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0% 이상이 노동조합원으로 민간에 비하여 노동조합조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.

□ 고용보호 수준을 국제비교하면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로 높게 나타난 반면, 집단해고는 4위로 고용보호 수준이 상당히 낮음.

- 또한 임시고용의 경우, 기간제 계약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7위로 낮았으나, 파견직 근로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은 33위로 매우 높은 수준

□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상당히 광범위하여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- 고용보험의 경우 취업자의 약 40%, 적용대상의 1/4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남아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.
-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저임금 비정규직일수록 미가입 비율이 높아 취약계층의 고용-복지 연계를 통한 고용률 70%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음.
- 한편,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59세 총인구의 30.0%인 945만 명과 가입대상 가운데 미가입자로 취업자 2,182만 명의 26.7%인 583만 명이 미가입자로 남아 있어, 총인구(3,147만명)의 절반(48.6%) 수준(1,528만명)에 이르고 있음.

□ 따라서 향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기업 및 공기업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와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와 차별의 완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어야 함.

- 일부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고용보호 조항을 억제할 수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과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금전적 보상제도의 허용이 필요

- 이와 더불어 연공서열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의 전환이 필요
 - 또한 비정규직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일업무에서 유사한 업무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을 상용화하고 규제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변경할 필요
 -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의 생성과 소멸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은 사업장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참여 정부와 MB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통합적인 사회보험 적용·징수 및 소득파악기관인 징수공단의 설립을 재검토할 필요
- 한편,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가 원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나 쉽지 않은 상황
-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%에 불과하고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노사는 주로 대기업의 노사이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그들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할 수 있음.
 -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큰 틀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타협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.
 - 따라서 노사정대타협이 잘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Plan B가 필요
 - 즉, 정부와 공익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방향 설정 및 의제 주도할 필요

발표 3.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

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

- 글로벌 경제에서는 서비스산업도 글로벌화되어 새로운 성장기회가 되고 있음.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커서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함

- 유망서비스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, 교육 등은 사회서비스이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할 때 일반국민들은 기존에 누리던 공공성(혹은 소득재분배적 기능)의 훼손을 우려하므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
 - 의료의 경우, 국내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가운데 외국환자 유치 혹은 해외병원수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

- 서비스산업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정책이해가 필수적임. 그러나 KDI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(2014년 9월, KDI 경제정보센터)
 - 의료의 경우, 사회적 논란이 높았던 ‘투자개방’, ‘의료자법인’, ‘원격진료’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10% 미만이었음
 -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책내용을 설명하여 주었을 때 자신들의 의사를 밝혔고 ‘모르겠다’는 응답은 10%이하로 하락
 - 또한, 외국환자 진료 혹은 해외 병원수출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대체로 찬성이 더 높았음

□ 기추진 중인 유망서비스산업과 함께 사업서비스의 육성이 필요하며 글로벌 산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함

- 개도국은 급속한 산업화에 비해 사업서비스 역량이 부족하여 선진국 수입에 의존
- 선진국의 경우 산업생산의 해외이전 공백을 사업서비스 육성으로 대체하여 '90년대 이후 급속한 사업서비스의 성장을 보였음
 - OECD 통계에 의하면 경제발전 수준(1인당 GDP)과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
-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비용우위가 있고 높은 교육열로 인재풀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음

□ 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서비스는 경쟁제한적이고 기업화되지 못하여 경쟁력이 취약

- 전문자격사제를 통한 인원통제, 이중개설 금지가 해소될 필요
-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들의 가격을 비용투입 측면에서 책정하던 관행이 시정되어야 함
- 수출 등 독자적 시장개척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져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함
- 제조공장만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하여 사업서비스가 융합된 클러스터로 재구축되어야 함

발표 4.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

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

□ 문제인식 및 기본방향

- 문제인식: 한국경제는 성장여건이 악화되는데 가운데,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분야의 역할에 대한 기대 고조
- 기본방향: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추구
 - 금융시장의 마찰적 요인(자금 공급자-수요자간 정보비대칭성, 기술 가치의 불확실성, 신용자원배분의 구조적 비효율성 등)은 기술에 대한 과소투자와 생산성저하 등을 초래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약화

□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방향

1. 은행부문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

- 은행내 성과보상체계를 중·장기성과에 연동되도록 인센티브를 재조정함으로써 유망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
 - 모험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, 유망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·장기 시계에서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강화
- 은행대출에 대한 관리·감시비용(monitoring cost)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기반 모색
 - 예컨대, 은행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신용보증조합(mutual credit guarantee)을 결성함으로써 조합원간 상호 관계형성에 의해 은행대출에 대한 관리·감시비용을 분담

-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신용자원배분 효율화
 - 기술평가정보(TCB 등)의 품질·활용도 제고, 기술평가인력 양성, 관계형 금융역량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신용자원배분 효율화
- 기술금융 촉진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
 - 예컨대, 특허권시장 활성화 등 기술금융 기반여건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

2. 모험자본 육성 및 자본시장 활성화

- 창업생태계의 동태적 구조에서 적극적 모험자본의 역할 주목
 - 창업생태계의 순환구조-예컨대, 창업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창업의 순환으로 구성-상에 있어 적극적 모험자본의 역할이 중요
- 벤처캐피탈제도의 통합·효율화를 통해 규제차익 및 과다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정책펀드 효율화와 민간모험자본 활성화
 - 동일 기능의 벤처캐피탈(VC)에 대한 복수 법령과 과다규제는 관리 감독 중복 및 규제차익을 초래함으로써 민간 모험자본의 VC시장 진입 저해
- 자본시장간 경쟁체제 유도로 자본시장 활성화
 - 예컨대, 코스피 및 코스닥(코넥스)시장을 경영 분리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 유도

3. 구조개선 촉진과 자원배분 효율화

-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
 - 기본방향: 저생산성 영역에서 고생산성 영역으로 자원재배분 활성화
 - 기업부실이 가시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적·선제적 방식의 기업 자율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-예컨대, 사모투자펀드(PEF)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- 자본시장 활성화방안 모색
 - 부실기업에 대한 기존 구조조정 및 퇴출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 모색
-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역량 및 감독체계 효율화
 - 시장 자율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역량 및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에 따른 신용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제거
- 기업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역량 및 역할 재정립
 - 신기술 기반의 업력이 짧은 유망기업에 정책금융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장성을 중심으로 신용자원배분 유도